

고속도로 · 운동장에도 응급헬기 뜬다

총리훈령 '공동운영 규정' 제정...협조의무 등 보완 기관별 출동 요청 · 결정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장이 아닌 고속도로나 운동장 등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한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 체계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 국방부 · 경찰청 · 소방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지난 15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3월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동운영 규정을 정부부처 내 규율성을 지닌 행정규칙인 총리훈령으로 제정, 단순 상황 공유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소방청 소관 3469개와 복지부 소관 828개 등 각 정부기관이 보유한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착륙장 중심 운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조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차선 이상 고속도로 사고로 중증의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리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해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운동장 등에선 헬기 착륙 시 흙먼지가 발생해 응급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 살수차가 미리 물을 뿌려 먼지를 최소화한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 내용도 포함됐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는 119종합상황실이 맡는다.

지금은 헬기 출동 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게 된다. 단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유통통제실로 바로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

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토록 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18일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올해 12월까지 개선 · 보완 사항 검토를 위해 참여기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시범운영기간을 가진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복지부 6대, 국방부 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더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도심 집단 폐사 비둘기서 살충제 성분 검출 지자체, 수사 의뢰

광주도심서 집단 폐사한 비둘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관할 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 지역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된 비둘기 사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동구는 비둘기 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맡겨 이 같은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

검출된 살충제는 카바메이트계 독성 물질인 카보퓨란(carbofuran)으로 검출량은 치사량의 100~200배로 확인됐다.

동구는 누군가 비둘기를 고의로 죽일 목적으로 살충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9시15분께 동구 남광동 고가도로 밑 인도 · 천변 등지에서 비둘기 6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조인호 기자



'모친 살해' 20대, 2심 징역 17년 "감형, 부모도 허락할 것"

본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이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이씨가 평생 징역을 산다고 해도 죄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40대 중반 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단 하루도 주어진 않지만, 이씨에게는 교도소 생활이지만 17년이나 시간이 주어졌다"면서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께 바치는 글 첫 페이지를 오늘 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에 경기 부천

1심 "자식에 의해 생명 잃어" 징역 22년

2심, 동기 고려... "어머니도 눈물 흘릴 것"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중에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이씨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 법정 진술을 통해 이씨의 불우했던 성장과정과 남동생이 장애를 갖고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후 무절제한 채무부담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으나 질책받고 무너진 과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생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 어디선가 지켜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릴

시에 소재한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등을 통해 빚을 돌려막다가 채무가 8000여만원에 이르자 모친과 상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모친이 "함께 죽자"며 본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이 어머니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정당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해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캐릭터들과 함께 춤을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9'에서 어린이들이 꼬모와 춤을 추고 있다.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내일 자정께 제주 직접영향권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오는 19일께 제주도에 접근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초 예상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태풍의 진로가 꺾였기 때문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hPa)에 순간최대풍속 18m의 바람을 동반한 소형급 세력으로 성장해 북북동진하고 있다. 이동속도는 시속 13km 정도다.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19일 자정께에는 태풍 중심부 순간최대 풍속이 24m, 시속은 86km에 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파악했다.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제주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한반도 인근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탓에 앞으로 세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차가운 바다가 태풍의 발달을 막는 것이다.

특히 중국 상하이 부근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에너지원인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기 어려워 다나스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당도했을 때는 세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 설명이다.

다만 태풍이 지나며 우리나라 주변 기업계가 영향을 받아 장마전선에 의

한 강수량과 강수지역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장마전선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런 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제주도는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 구름대가 남서쪽 해상에서 시간당 25~30km의 속도로 북동진하며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 비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지만, 비구름대가 남해상에 머물면서 한라산을 경계로 남쪽지역은 일시 소강상태에 들었다.

예상 강수량은 18일까지 제주도 전역에 50~100mm 정도다.

뉴시스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 논란에 사의 표명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이 지속되는 무자격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거 활동했던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록 여부로 인해 센터장 자격 논란이 시작됐다"며 "더 이상 새로운 순전을 지향하는 시정에 발목 잡히는 구실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신 센터장은 "센터장직을 그만두지만, 봉사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함께 참여하면서 활력 넘치는 순전을 위해 허식 시장을 뜯겠다"면서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려고만 하는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23일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처리 감사 결과로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 경정제 이상 징계 조치와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취소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순천시에 보냈다.

시는 센터장 채용업무 과정 중 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분석하고 채용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신 씨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모를 낸 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채용 취소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았다.

시는 신 센터장 채용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해 법률 자문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순천=김승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